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 내생적 순위형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

김지영 ■ 선문대학교**

유민희 ■ 연세대학교***

최윤정 ■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내생성을 고려한 순위형 프로빗 모형(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을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에 적용하여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재분배 및 복지정책의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소득 및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인식과 정책 선호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졌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 불평등 인식의 영향을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룹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및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 불평등 인식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구변수인 기회 불평등 인식과 자기 임금의 과소보상 인식이 클수록, 사회적으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경제적 불평등, 기회불평등, 내생적 순위형 프로빗 모형, 재분배정책 선호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과제번호: NRF-2019S1A5C2A02082650)

** 주저자. 선문대학교 국제경제통상학과 조교수 (E-mail: jeeyoungkim@sunmoon.ac.kr)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E-mail: mhyou@yonsei.ac.kr)

**** 공저자.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E-mail: yun.choi@yonsei.ac.kr)

I. 서 론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수인 지니계수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18년의 지니계수는 2011년의 통계집계 이후 가장 낮은 0.345의 수준을 기록하면서 불평등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반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자료²⁾를 이용하여 산정한 지니계수는 2018년 4분기 기준 0.309로 1998년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소득분배지표 추정에 사용되는 표본과 집계 방법 등의 차이에 대한 격렬한 논쟁은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소득불평등에 대해 가지는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도성장기 이후 찾아온 사회 이동성의 현저한 감소와 심화되는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재분배와 복지정책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어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를 통하여 발현되고 있다.³⁾ 최근에는 기존에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려되었던 절대적 소득 및 상대적 소득과 더불어 상대적 소득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⁴⁾ 이에 따라 경제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복지 및 재분배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장승진 2017; 하솔잎·이우진 2016; Alesina & La Ferrara 2005; Benabou 2000; Kelly & Enns 2010).

그러나 불평등 인식 변수의 내생성을 다루고 있는 문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불평등 인식과 재분배 및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누락해서 발생하는 누락변수문제(omitted variable problem)로 인한 내생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정부 주도의 정책의 선호도와 불평등에 대한 인식 간의 역 인과관계

1) 통계청 홈페이지 참조: <https://kostat.go.kr/>

2) 소득 분배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공식 소득 분배지표 산정을 위해 2016년 이후부터 기존에 사용했던 가계동향조사(농가경제조사 포함)를 행정자료로 보완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였다(e-나라지표 홈페이지 참조, www.index.go.kr).

3) 많은 연구가 사람들은 자신과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통하여 행복과 삶의 만족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Cheung & Lucas 2016; Clark & Oswald 1996; Ferrer-i-Carbonell 2005; Lutter 2005; Oishi & Kesebir 2015; van Praag 2011).

4) 인식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로는 상대적 소득수준에 대한 오인(misperception)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실험한 Cruces et al.(2013)을 참조.

(reverse causality)가 존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불평등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복지 및 재분배정책을 선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재분배 및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사람일수록 경제적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Kuhn 2015). 이렇게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 일치 추정량을 얻을 수 없다(Maddala 1983).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해외 연구의 경우 Kuhn(2015)이 예외적으로 존재하며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는 내생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부 정책 선호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⁵⁾의 2014년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범주형 변수의 특성과 내생성을 고려하는 내생적 순위형 프로빗 모형(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에 조건부 혼합과정(Conditional Mixed Process: 이하 CMP)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내생성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고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재분배정책 및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준다는 실증 모형을 가정하고 검증한다. 즉, 기회 불평등 인식변수를 소득 불평등 인식변수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접근하였다.

본 연구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소득 불평등과 정책 선호의 관련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분석에 사용한 내생적 순위형 프로빗 모형을 설명하고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제5장에서 연구의 의의, 한계점 및 추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며 맺는다.

II. 선행연구

소득재분배 정책은 사회 구성원 간의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의미하며, 소득재분배 정책 관련 연구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다양한 조세제도 및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또는 개인 구성원의 특성이 소득재분배 정책 또는 정책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5)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홈페이지(<http://kgss.skku.edu>) 참조.

본 연구는 후자의 연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후자의 연구에 있어서 Meltzer & Richard(1981)는 소득의 불평등과 재분배정책 선호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첫 연구로서 중위소득과 평균 소득의 격차가 클수록 중위권 유권자가 선호하는 소득재분배 규모가 커짐을 보인다. Meltzer-Richard 가설은 합리적인 개인들이 경제적 이득과 손해를 고려한 효용 극대화를 통해 재분배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소득 불평등과 소득재분배 선호 간의 정의 관계를 주장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수행된 많은 후속 연구는 경제적 요인 및 이해관계뿐 아니라 정치 성향, 분배에 대한 가치관, 개인소득에 대한 인식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최근에는 객관적인 경제 상황, 개인 특성 지수와 재분배정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 이외에도 빈곤, 공정성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관한 연구 그리고 주관적 인식과 정책 선호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재분배 및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와 소득 불평등, 계층상승 가능성,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 등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많은 국내 논문들이 존재한다(백승주·금현섭 2012; 이지은·이재완 2015; 조정인 2014). 하지만 객관적인 불평등(objective inequality)과 주관적 불평등(subjective inequality) 간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혹은 주관적 인식이 재분배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주관적 불평등인식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커진다. 최근에 진행된 인식 및 가치관과 재분배정책 선호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 조정인(2014)은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의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데이터에 순위로짓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소득과 분배, 교육 기회, 여성의 대우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의 재분배정책을 지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웅·임란(2014)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 복지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정부신뢰, 정부평가, 복지방향, 사회인식 및 빈곤의 원인에 대한 인식 등이 복지 확대의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복지 확대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사회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충환(2015)은 2013년 제8차 한국 복지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성장보다는 분배와 빈곤층 지원 확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지만, 보편적 복지지향에 대해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남을 보였다. 저자는 이를 복지재정의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현실적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솔잎·이우진(2016)은 한국복지패널데이터의 2010년 5차 부가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소득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의 재분배에 대해 선호도가 높아지는지는 반면, 교육 분야

나 장애인 지원 분야를 제외하고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희정(2018)은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주관적 계층 인식이 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의해 변화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또한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공정성 인식이 사회의 복지증가라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복지정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일부 연구에서 소득 및 계층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자기 이해 관계 또는 신념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서도 재분배에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고소득층에서도 재분배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양방향의 선호가 나타날 수 있다(류만희·최영 2009). 장승진(2017)은 공정에 대한 인식과 소득 불평등, 계층의식이 복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 설명한다.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지지를 감소시키며 이는 사회의 절차적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수록 복지 확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득 및 계층의 효과는 총자산이 높은 사람일수록 혹은 자신이 상위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복지 확대를 찬성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개인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거시적인 경제 사회적 변수, 개인의 경제적 여건, 경험과 사회적 위치, 정치적 성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소득,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등과 같은 변수들을 개인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서베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 계층 인식, 공정성 인식 등과 같은 인식에 대한 단순한 통계나 패턴, 국가 간의 지수 비교 등이 행해져 왔다.

인식과 신념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실증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따라서 인식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재분배정책에 대한 선호를 연구한 문헌은 극히 드물다. 예외적인 논문 중 하나인 Kuhn(2015)은 스위스의 서베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임금 불평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변수에 대한 도구변수로 지역 내 평균값(region-within-country means of subjective inequality perceptions)을 사용하였다. 주변의 주관적인 인식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주된 근거는 직장 동료, 이웃, 친척을 비롯한 주변 지인이 가진 불평등에 대한 평균적 의견은 개인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는 영향을 주는 반면 개인의 정치적 태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저자들은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선호 사이

에 나타날 수 있는 내생성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국내 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용 가능한 데이터 및 변수의 제약은 국내 연구의 내생성 고려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더욱이 계량방법론 상의 어려움으로 순서형 변수의 내생성 문제를 다루는 실증분석은 해외연구에서도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분배정책 선호에 대한 소득의 불평등인식의 영향 분석에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순위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한 첫 연구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I. 분석 모형 및 데이터 설명

1. 분석 모형 (내생적 순위형 프로빗 모형)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식 (1)과 같은 회귀모형을 가정하였다.

$$y_i^* = \beta x_i + W\gamma + \epsilon_i \quad \epsilon_i \sim N(0,1) \quad (1)$$

종속변수인 정책에 대한 선호도 y_i^* 는 연속형 변수가 아닌 순위형(ordinal)으로 관찰되며 다음과 같이 각 범주를 결정하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⁶⁾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일 경우 순위형 프로빗 모형(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한다(Greene 2000).

$$y = g(y_i^*) = \begin{cases} 1 & \text{if } y_i^* \leq c_1 \\ 2 & \text{if } c_1 < y_i^* \leq c_2 \\ \vdots & \\ j & \text{if } c_{j-1} < y_i^* \leq c_j \\ j+1 & \text{if } c_j < y_i^* \end{cases}$$

본 연구에서는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 1) '재분배정책

6) $c_1, c_2 \dots c_j$ 는 절사점(cut-points)으로써 모형 내에서 추정되는 모수(parameter)이며 종속변수가 j 개일 경우 $j-1$ 개가 추정된다.

선호도'와 2) '정부주도의 복지정책 선호도'의 두 변수를 설정하였으며 설문 결과에 따라 관찰된 y_i 는 '재분배정책 선호도'의 경우 1부터 5 사이의 숫자를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 선호도'의 경우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가진다. W 는 외생적 설명변수인 개인의 직업, 성별, 연령, 결혼 여부, 거주지, 교육수준, 가구소득과 같은 인구 특정 학적 변수들로 구성된 벡터라고 가정한다. 설문 문항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식 (1)에서 x_i 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로써 한국종합사회조사의 설문 항목 중 '사회의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정도 평가'에 대한 문항을 경제적 불평등 인식변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런데 만약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종속변수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사이에 역인과관계(reverse causality)가 성립되는 경우 또는 종속변수와 경제적 불평등 인식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누락(omitted variable)이 발생하는 경우 내생성(endogeneity)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Jones et al. 2013).

이러한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접근은 도구변수(Instrument Variables)를 사용하는 것이다. 도구변수는 내생변수와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찰되지 않는 요인들과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도구변수 접근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귀식 (2)를 분석에 추가하여 2단계(Two-step) 추정법을 사용한다.

$$x_i = Z\delta + W\zeta + \nu_i \quad \nu_i \sim N(0, \sigma^2) \quad (2)$$

이때 W 는 외생적 설명변수 벡터이고, Z 는 도구변수 벡터이다. 하지만 적절한 도구변수를 찾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도구변수 이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조건부 혼합과정(Conditional Mixed Process: CMP) 추정방법이다. CMP추정방법은 회귀식 (1)과 (2)의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SUR 모형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framework)하에서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추정함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다. 오차항 상관관계를 고려하고 순환적 추정구조에 의해서 회귀식 (1)과 (2)를 동시에 추정하기 때문에 도구변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⁷⁾ 또한 종

7)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내생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추정 결과가 일치 추정량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변량 프로빗이나 구조방정식, 2단계 최소자승법, 헤크만 2단계 추정 방법 등이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조건부 혼합과정 모형(Conditional Mixed Process: CMP) 추정 방법 이외에도 강건성 검증을 위하

속변수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Roodman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순위형 프로빗 모형과 더불어 회귀식 식별에 도움이 되는 도구변수를 사용함과 동시에 CMP추정방법을 사용한 분석결과를 함께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CMP 추정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정치의 일치성과 효율성을 만족할 수 있는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CMP의 결과와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도구변수를 사용하는 2단계 최소자승방법론은 첫 번째 단계에서 도구 변수를 사용하여 내생성의 문제를 가진 변수를 추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내생성이 있는 변수를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된 값으로 대체한 후 원래 식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반면 잔차 삼입방법(two-stage residual inclusion: 이하 2SRI)의 경우 1단계 분석에서 구한 잔차가 2단계 분석의 내생변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2번째 단계에서 원래식에 1단계의 잔차를 추가로 포함하여 분석한다. 이와 같은 2SRI는 비선형모형에서 2단계 최소자승방법론을 사용할 경우 추정치가 효율성(efficiency)의 가정은 만족하나 일치성(consistency)의 가정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Terza et al. 2008).

소득 불평등 인식에 대한 도구변수로는 자기소득에 대한 평가, 취업기회의 형평성 평가, 교육기회의 형평성 평가, 남녀 간의 형평성 평가의 네 가지 문항을 바탕으로 한 기회불평등 인식변수들을 사용한다. 도구변수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분석결과에서 다루었다.

2. 데이터와 기초 통계

경제적 불평등도에 대한 인식과 정부 정책 선호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제 12차 조사인 201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는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화 및 국제비교 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사회기초조사 데이터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사이다(김지범 외 2019).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의 모집단에서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 방법⁸⁾을 통해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을 시행

여 2SRI 방법(two-stage residual inclusion)도 적용하였으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표 5>참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KGSS의 설문지는 매년 조사하는 한국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여러 핵심적 내용들을 포괄하여 매년 조사하는 반복핵심설문(replicating core questions), 국가간비교사회조사(cross-national survey research)인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와 EASS(East Asian Social Survey⁹⁾)의 조사모듈, 그리고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특별주제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형태로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김지범 외 2019).¹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회불평등과 관련된 조사는 2009년과 2014년의 『한국종합사회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2009년 조사에서는 국제비교 연구를 위한 ISSP 주제로 설문에 포함되었으며, 2014년에는 한국 사회 특유의 주제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주제로써 설문에 포함되었다. 그중에서도 2014년 조사는 사회불평등 및 복지정책, 주관적 계층의식, 소득 정당성 등에 대한 설문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 논문의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김상욱 외 2016). 2014년은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부각되었던 해로 OECD와 IMF와 같은 국제기구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이례적으로 불평등의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보고서가 발행된 바 있다(IMF 2014; OECD 2014; Piketty 2014).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2014년에는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질문¹¹⁾이 문항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인식이 복지정책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재분배정책 선호도'와 '복지정책의 정부 개입의 선호도'로 나누어 살펴본다. 복지정책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 재분배정책을 포함하는 개념일 수 있다.¹²⁾ 그러나 재분배정책의 경우 정책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비교적 명백한 소득 이전의 특징을 가지므로 계층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
- 8) 다단계지역화활표집은 모두 여러 단계에 걸쳐 인구비례화물(PPS)로 층화된 지역별 집락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 9) 성균관대학교 리서치 센터는 한국을 대표하여 48개국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사기관인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ISSP)과 동아시아 4개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조사기관인 East Asian Social Survey(EASS)에서 활동하고 있다.
 - 10) 2003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14년 이후에는 격년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2018년 조사까지 완료되었다.
 - 11) 제12차 KGSS(2014)에서 다루어진 특별주제로써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에 관련된 조사는 귀속지위와 성취지위의 중요성, 차별, 부패, 교육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정부의 역할, 계급갈등 인식, 주관적 계층의식, 주관적 사회이동, 소득 정당성, 사회에 대한 이미지 등 국제간 비교가 가능한 문항들이 조사에 포함되어 있다(김상욱 외 2016).
 - 12) Lowi(1972)는 정책(Policy)을 정책 결정자의 특성과 정책의 영향에 따라 분배, 재분배, 규제, 구성 정책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복지정책을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경우 분배정책과 재분배정책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남재욱 2018).

할 수 있어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두 가지 정책 선호도를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종속변수인 '재분배정책 선호도'와 '복지정책의 정부 개입의 선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KCSS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항 중 각각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의 문항과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문항의 응답 결과를 사용하였다. 해당 두 변수의 응답은 해석의 편의를 위하여 정책의 선호가 강할수록 큰 값을 갖도록 원자료의 역 코딩 값을 사용하였다.¹³⁾

재분배정책 및 복지정책 선호가 계층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자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분석 이외에도 객관적 계층 및 주관적 계층 의식을 구분하여 계층별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계층 구분을 위해 사용되는 객관적인 기준 중 하나인 소득변수를 이용하여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 소득별 상중하(200만 원 미만(하위 22%), 200~750만원, 750만원 이상(상위 16%)) 세 구간을 구분하였다.¹⁴⁾ 주관적 계층 구분을 위해서는 자신이 한국 사회의 최하층(=1)에서 최상층(=10) 범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소득 기준으로 분류된 계층 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이와 유사한 관찰치를 갖도록 세 그룹(상중하(상(7~10), 중(4~6), 하(1~3)))으로 나누었다.

재분배정책 선호도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재분배정책에 대하여 찬성한 비율은 68.7%(매우 찬성: 23.7%, 다소 찬성: 45.0%)로 과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 분포와 주관적 계층의식별 분포가 대체적으로 비슷하지만, 주관적 계층의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위층 응답자의 찬성 비율이

13)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의 응답 결과는 원조사에서는 '1=매우 찬성'부터 '5=매우 반대'에 이르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매우 반대는 1, 매우 찬성은 5로 재구성하여 찬성, 중립, 반대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복지정책 선호'에 사용된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질문의 경우 10점 척도('1=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부터 '10=자신이 각자의 생계를 위해 책임을 져야 한다')를 역으로 구성하여 정부가 복지 책임이 없음을 1, 정부가 복지 책임이 매우 많이 있음을 10으로 재구성 한 후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유경 2012). 이 기준에 따라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2006년 중산층의 범위를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499만원을 만족하는 가구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하위 소득 가구 기준을 월 20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경우 하위 소득 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약 22%로 5분위 소득 하위 20%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상위층 응답자의 찬성 비율보다 약 7%p 높았다. 이는 소득별 기준으로 상위층과 하위층의 찬성 비율이 유사한 것과는 다른 분포의 특징을 보여주며, 재분배 선호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과 주관적인 기준에 따른 계층별 분석결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표 2>는 복지정책의 선호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복지의 책임이 개인보다는 정부에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중 약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별, 주관적 계층의식별로 살펴보면 각각에서 하위층 응답자가 정부의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른 계층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표 1> 재분배 정책 선호에 대한 분포

응답척도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상	중	하	상	중	하
매우 찬성	324 (23.7%)	40 (19.0%)	208 (24.3%)	74 (25.2%)	42 (19.4%)	188 (21.4%)	94 (34.3%)
다소 찬성	617 (45.0%)	104 (49.5%)	383 (44.8%)	124 (42.2%)	105 (48.6%)	404 (45.9%)	108 (39.4%)
찬성도 반대도 아님	280 (20.4%)	38 (18.1%)	176 (20.6%)	64 (21.8%)	43 (19.9%)	196 (22.3%)	41 (15.0%)
다소 반대	124 (9.1%)	23 (11.0%)	76 (8.9%)	24 (8.2%)	22 (10.2%)	78 (8.9%)	24 (8.8%)
매우 반대	25 (1.8%)	5 (2.4%)	12 (1.4%)	8 (2.7%)	4 (1.9%)	14 (1.6%)	7 (2.6%)
전체	1370 (100.0%)	210 (100.0%)	855 (100.0%)	294 (100.0%)	216 (100.0%)	880 (100.0%)	274 (100.0%)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계산

- 주: 1) 재분배정책의 선호도 변수에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문항이 사용됨
 2) 월평균 가구소득의 분류기준: 상(750만원 이상), 중(200~750만원), 하(200만원 미만)
 주관적 계층 인식 분류기준: 상(7~10), 중(4~6), 하(1~3)
 3) 분석에는 매우 찬성과 다소 찬성을 묶어 찬성으로,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를 묶어 반대로 그룹화하여 분석함

<표 2> 복지정책 선호 분포

응답척도	전체	월평균가구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상	중	하	상	중	하
정부책임 상	490 (35.8%)	69 (31.2%)	306 (35.8%)	115 (39.1%)	75 (34.7%)	299 (34.0%)	116 (42.3%)
정부책임 중	753 (55.0%)	132 (59.7%)	475 (55.6%)	146 (49.7%)	117 (54.2%)	501 (56.9%)	135 (49.3%)
정부책임 하	127 (9.3%)	20 (9.0%)	74 (8.7%)	33 (11.2%)	24 (11.1%)	80 (9.1%)	23 (8.4%)
전체	1370 (100.0%)	221 (100.0%)	855 (100.0%)	294 (100.0%)	216 (100.0%)	880 (100.0%)	274 (100.0%)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계산

주: 복지정책의 선호도 변수에는 “(개인이 아니라)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문항이 사용됨. 원조사에서 조사된 10점 척도의 응답을 편의를 위하여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제시함. 가구소득과 계층의식 분류는 <표 1>의 주와 동일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설명변수인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질문,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 등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해주십시오 - 소득과 재산.”을 사용하며, 이에 대한 응답은 “1=매우 평등”부터 “5=매우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표 3>은 응답자들의 한국사회의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다. 한국의 소득과 재산이 비교적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14.3%인 것에 비해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과반수 이상(51.6%)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가 기회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이양호 외 2013). 소득과 같은 개인의 성취는 노력과 같은 개인이 통제 가능한 요인과 환경(출신 지역, 성별, 인종, 가족의 배경 등)과 같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Romer 1993). 기회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계량화하는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가 존재한다(신우진 외 2016; Brunori et al. 2013).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소득 및 재산 불평등에 대한 인식도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변수를 ‘소득 및 재산 불평등 인식’변수의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사람들이 가진 소득 불

평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 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소득 불평등 인식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부 재분배 및 복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모형을 추정한다. 제 4장의 추정결과는 소득 불평등 인식과 기회 불평등 인식 간의 정의 관계, 그리고 소득 불평등 인식과 정부 정책 선호 간의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

기회 불평등 인식변수의 『한국종합사회조사』 설문 문항으로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기회, 여성의 대우, 취업의 기회가 어느 정도 평등한지 묻는 질문(“1=매우 평등”부터 “5=매우 불평등”)을 사용하였다. <표 3>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대우, 취업기회의 경우 불평등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교육기회의 경우 다른 두 변수에 비해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소득·재산 불평등과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

불평등 인식	소득과 재산	교육기회	취업기회	여성의 대우
매우 평등	25 (1.8%)	168 (12.3%)	50 (3.7%)	72 (5.3%)
약간 평등	171 (12.5%)	543 (39.7%)	304 (22.2%)	288 (21.0%)
그저 그렇다	466 (34.1%)	345 (25.2%)	431 (31.5%)	463 (33.8%)
약간 불평등	525 (38.4%)	266 (19.4%)	475 (34.7%)	458 (33.5%)
매우 불평등	180 (13.2%)	47 (3.4%)	110 (8.0%)	88 (6.4%)
전체	1367 (100.0%)	1369 (100.0%)	1370 (100.0%)	1369 (100.0%)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계산

- 주: 1) 사회의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 인식변수에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해주십시오 - 소득과 재산”이라는 문항이 사용됨. 기회의 불평등 인식변수에는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 등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해주십시오 - 교육 기회, 취업기회, 여성의 대우”라는 문항이 사용됨
- 2) 소득과 재산 불평등에 관한 질문에서 모름/무응답 3명 제외; 교육기회, 여성의 대우에 관한 질문에서 모름/무응답자 각 1명 제외함

하지만, 이러한 불평등 인식 정도가 객관적 소득정도에 따라 또는 주관적 계층 인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먼저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불평등 인식의 경우 객관적, 주관적 기준과 상관없이 상위계층보다는 중위·하위 계층일수록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았다(부록 표 1). 하지만, 주관적 하위 계층 그룹에서 다

른 계층에 비하여, 또한 객관적 소득 기준의 하위 계층에 비해서도 소득과 재산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객관적 소득수준과 주관적 계층 인식별로 서로 다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그룹별의 특성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도구변수로 사용한 취업기회와 교육기회의 경우 객관적, 주관적 계층별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소득과 재산보다 취업 및 교육 기회가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부록 표 2~3). 반면 여성의 대우에 대한 인식은 객관적 하위계층의 경우 오히려 상위계층보다 평등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동시에 매우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표 4). 이러한 통계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앞에서 설명한 기회 불평등 인식변수 이외에도 '자기 소득에 대한 인식' 변수를 추가적인 도구변수로써 사용한다. 소득 불평등 및 기회 불평등 인식변수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변수인 반면, 자기 소득에 대한 인식은 개인에 대한 인식이라는 차이를 가진다. 자기 소득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질문, "귀하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소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에서는 응답자의 46.2%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 능력 및 노력 대비 공정하다고 인식하였으며,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4%인 것에 비해 적게 받고 있다는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아 49.5%가 과소보상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재분배정책 및 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포함하였다. 먼저 개인의 객관적 경제수준 변수인 월 평균 가구소득(21점 척도로서 척도의 1단위 증가는 50만원 소득 증가를 의미. 소득이 없는 응답자를 0으로 설정), 임금노동자 가변수와 비경제활동자·실업자 가변수¹⁵⁾(기준은 자영업자), 정치적인 성향(1=매우 진보적'부터 '5=매우 보수적'까지 5점 척도), 한국사회의 경제 상황에 대한 두 종류의 인식(경기침체 및 저성장과 실업 및 빈곤에 대한 취약성에 대한 7점 척도), 그리고 인구학적 변수인 성별(남성=1, 여성=0) 도시거주여부, 결혼여부 가변수, 교육수준(7점 척도), 부모세대 대비 생활수준변화(5점 척도), 연령이 통제변수로 포함되었다. <표 4>는 주요 변수에 대한 변수명과 한국종합사회조사(KCSS)의 문항 및 측정 방법을 보여준다.

15) 비경제활동자는 535명이고, 실업자는 47명이다, 이 두 그룹을 통합하여 분석한 실증결과와 구분한 실증분석결과가 유사하여 상대적으로 소수인 실업자를 비경제활동자와 함께 포함하여 가변수를 설정하였다.

<표 4> 주요 변수 설명 및 응답 측정 방법

변수	관련 설문 문항	척도
종속변수		
재분배정책 선호	소득격차를 줄이는 건 정부 책임이다.	1: 매우 반대...5:매우 찬성
복지정책 선호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한다.	1: 책임없음...10: 책임있음
설명변수 및 계층변수		
소득불평등 인식	한국 사회에서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 등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해주십시오	1: 매우 평등,... 5: 매우 불평등
정치성향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진보적,..., 5: 매우 보수적
한국사회 취약도	현재 한국사회는 아래의 각 위험에 어느 정도 취약합니까? - 경기침체/저성장 - 실업/빈곤	1: 전적으로 취약하다... 7: 전혀 취약하지 않다.
부모세대 대비 생활수준 변화	귀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귀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훨씬 좋아졌다... 5: 훨씬 나빠졌다
월평균가구소득	월평균가구소득(범주형)	0: 무소득, 1: 50만원 미만, ...21: 1000만원~1099만원
임금노동자	더미변수	1: 임금노동자, 0: 그 외
비경제활동자·실업자	더미변수	1: 비경제활동자 및 실업자, 0: 그 외
교육수준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0: 무학, ..7: 대학원
성별	더미변수	1: 남자, 0: 그 외
나이	만 1년 단위 연속 값	
결혼	더미변수	1: 기혼, 0: 그 외
도시거주	더미변수	1: 도시, 0: 그 외
주관적 계층의식	한국사회의 최하층을 1로 하고 최상층을 10으로 한다면 귀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최하층, ..., 10: 최상층
소득불평등 인식에 대한 도구변수		
자기 소득 보상에 대한 인식	귀하의 능력이나 노력에 비추어 볼 때 귀하의 소득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다... 5: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
기회 불평등 인식	한국 사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 등 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해주십시오 - 취업기회 - 교육기회 - 여성의 대우	1: 매우 평등... 5: 매우 불평등

IV.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종속변수인 정책 선호의 경우 1) 재분배정책 선호와 2) 복지정책 선호 변수를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주요 설명변수로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변수를 사용하였다. 경제 불평등 인식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기 위해 내생적 순위형 프로빗모형(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데이터(Pooled data) 뿐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인 월평균 가구소득과 주관적인 계층의식으로 나눈 그룹별 데이터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¹⁶⁾

1. 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분석(Pooled Regression) 결과

<표 5>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Pooled Regression) 결과이다. (1)과 (4)는 경제적 불평등 인식변수를 외생변수로 가정한 순위형 프로빗 모형의 결과를, (2)와 (5)는 경제적 불평등 변수를 내생변수로 고려하여 자기 소득에 대한 인식변수와 기회의 불평등 인식변수들을 도구변수로 사용한 내생적 순위형 프로빗 모형에 CMP추정방법을 사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3)과 (6)은 CMP추정결과의 강건성검정을 위해 2SRI를 적용하여 내생성을 고려한 결과를 보여준다.

추정 결과, 모형 (1)과 (4)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재분배정책 및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 간의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정도가 크다고 느낄수록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고, 개인보다는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음을 의미한다. 재분배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는 조정인(2014)과 하솔잎·이우진(2016) 등의 결과와 일치한다.¹⁷⁾ 이에 대해 조정인(2014)은 “소득과 분배라는 ‘결과’의 불평등이

16) 계층별 분석 이외에도 세대 간 정책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연령을 세대별(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로 가변수를 만들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일부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유의하게 재분배정책을 선호하였으나, 복지정책 선호와 관련해서는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연령별 분석이 그 외 다른 변수의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17) 본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년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조정인(2014)은 동일 데이터의 2009년도 데이터, 하솔잎·이우진(2016)은 한국복지패널의 2010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하솔잎·이우진(2016)은 복지정책 선호 변수로 복지 확대를 위한 중

재분배정책 선호와 연결되는 것을 결과의 불평등이 정당한 격차가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함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복지정책의 경우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다 하더라도 복지정책 선호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 결과(이충환 2015)와는 달리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한편,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2)과 (5)의 추정 결과는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형 (1)과 (4)에 비해 소득불평등 인식과 정책 선호 간의 정의 관계가 더 강해졌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소득 보상에 대한 인식과 기회의 불평등 인식이 소득불평등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소득불평등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책 선호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였다. <표 5> 밑단의 $Atanh\rho$ 는 내생성 존재여부를 보여주는데 재분배 정책과 복지정책 선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각각 -0.179와 -0.195)을 나타냈다.¹⁸⁾

즉 소득 불평등인식과 정책 선호 간의 내생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세히 살펴보면 부(-)의 $Atanh\rho$ 값은 소득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찰되지 않는 요인이 정책 선호에는 반대 방향의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리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소득 불평등 인식에도 영향을 주고 정책 선호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불공정인식이 소득 불평등 인식으로 이어지지만 반면 불공정인식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정책 선호도가 낮은 경우, 이러한 불공정인식을 회귀식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Atanh\rho$ 가 부(-)의 값을 가질 수 있다.¹⁹⁾

또한 내생성을 고려한 모형 (2)와 (5)에서의 소득 불평등 인식 변수의 추정치가 커지는데, 이러한 결과는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문헌의 결과에서 소득 불평등 인식의 영향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의 기여 중 하나이다.

도구 변수로 사용된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주요 인식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설정된 변수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값을 가지며 응답자들은 기회의 불평등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크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소득의 불평등

세에 대한 찬반 응답을 사용하였다.

- 18) $Atanh\rho$ 통계량은 식(1)과 (2)의 오차항의 상관관계에 대한 피셔의 z변환(Fisher's Z Transformation)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귀무가설($H_0: Atanh\rho=0$)을 기각하여 내생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Vargas 2015).
- 19) 서베이 데이터의 변수 제약으로 공정과 신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내생성 고려가 중요함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식으로 이어진다는 기존 이론 및 실증문헌들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소득에 대한 인식변수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가져, 자신의 소득이 과소 보상되었다고 생각할수록 사회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한편, 도구 변수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에 있어 본 연구는 비선형모형인 순위형 프로빗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에서 사용하는 F 통계량을 이용하여 도구 변수의 적절성을 식별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²¹⁾ 하지만 <표 5>와 <표 6>에서 제시된 1단계 추정식에서 대부분의 도구변수들이 유의수준 1%($p < 0.01$)을 만족하는 만큼 도구변수와 내생변수 간에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oodman & Morduch 2014).

이외에도 통제변수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기침체나 실업/빈곤 등이 취약하다고 생각할수록 재분배정책의 찬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요인들의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복지정책 선호의 경우 경기침체보다는 실업/빈곤 등이 취약하다고 생각할수록 선호가 강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정치성향 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재분배 및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큼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최유석(2011)은 주관적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분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성향의 영향은 기존 논문의 실증결과와 일치한다(김운태 외 2013).

연령 변수 효과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재분배를 선호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재분배 선호 간에는 양과 음의 상관관계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수적 성향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재분배정책을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연령이 높아지면서 소득이 줄어들고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오히려 재분배 정책 선호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변수의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 중 연령과 재분배 선호

20) 도구변수 선택에 대한 강건성(robustness) 확인을 위해 자기 소득 인식변수를 제외하고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변수들만 도구변수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자기 소득 인식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계수 값이 약간 증가하는 차이를 보이거나 통계적 유의성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의 경우 2단계 최소 자승법(Two Stage Least Squares)의 1단계 추정식에서 F 검정통계량의 값이 10 미만 일 경우 약한 도구 변수(Weak Instrumental Variable)일 가능성이 있다는 경험적 법칙(Rule-of-Thumb)을 적용하기도 한다(Staiger & Stock 1997).

간 양의 효과가 더 큰 것을 의미한다. 반면,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는 연령변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성별 가변수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복지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았다. 기존 문헌의 경우, 인구학적 변수들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거나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는데 본 연구의 경우, 성별과 연령의 경우 정책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외의 인구학적 변수 계수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표 5> 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 선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Pooled Regression)

모형	재분배정책선호			복지정책선호		
	(1) Ordered Probit	(2) CMP	(3) 2SRI	(4) Ordered Probit	(5) CMP	(6) 2SRI
소득분배불평등	0.123*** (0.039)	0.262*** (0.068)	0.262*** (0.076)	0.146*** (0.038)	0.276*** (0.065)	0.302*** (0.074)
정치성향	-0.107*** (0.035)	-0.101*** (0.036)	-0.114*** (0.037)	-0.090*** (0.033)	-0.086*** (0.034)	-0.077*** (0.035)
한국사회취약도 : 경기 침체	-0.120*** (0.041)	-0.103** (0.044)	-0.128*** (0.047)	0.029 (0.040)	0.041 (0.040)	0.032 (0.042)
한국사회취약도 : 실업·빈곤	-0.142*** (0.041)	-0.103*** (0.045)	-0.103** (0.048)	-0.130*** (0.040)	-0.112*** (0.041)	-0.099*** (0.042)
임금노동자	0.292*** (0.104)	0.283*** (0.107)	0.263** (0.108)	0.127 (0.094)	0.123 (0.094)	0.125 (0.096)
비경제활동자 및 실업자	0.167 (0.107)	0.155 (0.111)	0.149 (0.115)	0.056 (0.099)	0.042 (0.099)	0.067 (0.103)
성별	0.0603 (0.063)	0.07 (0.075)	0.032 (0.079)	-0.125* (0.067)	-0.118** (0.067)	-0.090 (0.070)
연령	0.007** (0.002)	0.007*** (0.003)	0.006* (0.003)	-0.002 (0.003)	-0.001 (0.003)	-0.002 (0.003)
결혼	-0.043 (0.085)	-0.048 (0.085)	-0.088 (0.090)	-0.029 (0.079)	-0.033 (0.079)	-0.004 (0.082)
도시거주	-0.203* (0.109)	-0.198* (0.108)	-0.232*** (0.115)	0.006 (0.094)	0.008 (0.094)	0.012 (0.098)
교육수준	0.011 (0.031)	0.013 (0.031)	0.009 (0.033)	-0.022 (0.029)	-0.020 (0.029)	-0.016 (0.030)
월평균가구소득	0.004 (0.007)	0.004 (0.007)	0.003 (0.008)	-0.003 (0.006)	-0.003 (0.006)	-0.005 (0.007)
부모 세대 대비 생활수준 변화	0.059* (0.034)	0.054 (0.034)	0.033 (0.037)	0.033 (0.030)	0.030 (0.029)	0.024 (0.031)
X uhat			-0.175** (0.074)			-0.186*** (0.073)

소득분배불평등에 대한 인식 결정요인						
자기소득에 대한 인식		-0.102** (0.040)	-0.102*** (0.039)		-0.113*** (0.040)	-0.102*** (0.039)
취업기회의 불평등		0.331*** (0.045)	0.324*** (0.038)		0.326*** (0.045)	0.324*** (0.038)
교육기회의 불평등		0.125*** (0.039)	0.122*** (0.036)		0.126*** (0.039)	0.122*** (0.036)
여성대우의 불평등		0.471*** (0.043)	0.478*** (0.035)		0.474*** (0.043)	0.478*** (0.035)
Atanhrho		-0.179** (0.070)			-0.166*** (0.070)	
NO. Obs.	1,350	1,350	1,239	1,350	1,350	1,239
Log likelihood	-1068	-2478	-965	-1205	-2615	-1106
Chi square	92.45	496.21	93.52	56.44	435.45	55.77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계산

- 주: 1) 재분배정책의 선호도 변수에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문항이 사용됨. 복지정책의 선호도 변수에는 “(개인 이 아니라)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문항이 사용됨
- 2) 모형 (1)과 (4)은 순위형프로빗(Ordered Probit)을 적용하고, 모형 (2)와 (5)는 조건부 혼합과정 모형(CMP)을 적용하고, 모형 (3)과 (6)은 잔차삼입방법(2SRI)을 적용함
- 3) 소득분배 불평등 인식에 대한 식은 재분배 및 복지정책 선호 식의 통제변수가 포함되나 지면상 생략함
- 4)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

<표 5>의 (3)과 (6)에 제시된 2SRI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정책선호에 대한 2단계 추정에서 1단계 잔차 ‘X uhat’이 설명변수로 들어가 있는데, 이 ‘X uhat’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순위형 프로빗 모형에서 내생변수를 고려하더라도 제 III장의 회귀식 (1)과 (2)의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제2단계 회귀식 추정(즉, 회귀식 (1)의 추정)에서 잔차 ‘X uhat’을 추가하여 분석해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 CMP추정방법은 이 오차항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로 고려한 SUR 모형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framework)하에서 우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표 5>에서 2SRI의 결과와 CMP 추정방법 결과가 상당히 유사한 점은 CMP추정결과와 강건성을 나타내고 있다.

2. 소득 계층별 분석 결과

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객관적 계층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객관적 기준인 가구소득별로 그룹을 나누어 살펴보았다(<표 6>). 대체적으로 소득불평등 인식과 정책 선호 간의 정(+)의 관계를 보였으며, 기회불평등과 소득불평등 인식 간의 정(+)의 관계가 나타나, 앞 장의 전체 데이터 분석 결과가 각각의 소득 계층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정책별로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경제적, 인구 사회학적 변수들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에 있어 차이가 발견되었다.

내생성 확인을 위해 1단계와 2단계 회귀식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Antahrho 통계값을 구한 결과, 재분배정책 선호에 있어서 상위계층의 경우와 복지정책 선호에 있어서 하위계층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내었다.²²⁾ 또한 내생성 고려 여부에 따라 소득 불평등 인식변수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졌다. 따라서 이 두 경우만 CMP추정방법과 도구변수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경우에는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위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표 6>에 정리하였다.²³⁾

먼저 재분배 정책 선호에 있어서 소득 하위 계층(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과 소득 상위계층(월 가구소득 750만원 이상)의 결과가 상당히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소득 불평등 인식과 재분배 정책 선호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가 소득 상위계층과 중위계층에서 나타났지만 하위계층에서는 소득불평등 인식변수의 계수가 0에 가까운 값을 가졌으며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았다. 특히 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내생성을 고려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인식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졌다.

반면 한국사회의 경기침체에 대한 취약도 인식 및 인구특정학적 변수(실업, 연령, 도시 거주 등)와 재분배정책 선호 간의 관계에 통계적 유의성은 중위계층과 하위계층에서 나타나는 반면, 상위계층에서는 소득 불평등 인식변수 이외의 다른 설명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소득 계층 간의 차이점은 각 계층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 소득 하위계층 및 중위계층은 소득 상위계층에 비해 직접적인 경제적·인구학적인 요인들에 있어 취약성이 더 클 수 있으며 이러한 직접적인 취약

22) 각각의 경우 Atanhroh의 값이 -0.416과 -0.4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3) <표 6>에서 내생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내생성을 고려한 CMP모형을 적용해 보아도 계수의 부호와 통계적 유의성이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성이 소득과 부의 재분배정책에 대한 강한 선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소득 하위계층에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재분배정책에 대한 소득불평등 인식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있다. 연령 변수 또한 다른 계층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하위 계층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는데, 하위소득계층의 노인 빈곤 문제 등의 이유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복지정책 선호에 있어서는 모든 계층에서 소득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하게 요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하위계층에서 소득 불평등 변수와 복지정책 선호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였을 때 불평등인식과 정책 선호 간의 정의 관계가 강하게 증가하였다.

그 외 설명변수의 경우, 재분배 정책 선호에서와는 달리 소득 하위계층의 통계적 유의성의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정치 및 성별 변수의 경우 상·중위 계층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변수의 경우 상위와 중위계층에서 복지 선호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상위 계층의 경우 여성일수록 복지를 정부 책임으로 보았으며 중위소득 계층에서는 남성에게서 복지를 정부 책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²⁴⁾ 소득 중위계층에서 자영업자보다 임금노동자가 재분배 및 복지정책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주들이 해당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비용에 상승이 있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정책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선호를 보일 수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Cusack et al. 2008).

하위 계층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효과가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정책의 성격에 기인할 수 있다. 재분배정책 선호는 소득 불평등 인식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복지정책의 경우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정부 주도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분배정책의 경우 소득 이전과 같은 정책의 수혜층이 소득 하위층인 것이 명백하므로 해당 계층에 속한 경우 특별히 소득불평등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재분배정책을 선호할 수 있다. 반면 복지정책의 경우 구성원 전체에 수혜가 돌아가는 포괄적인 정책이므로 전 계층에 걸쳐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선호도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동일 정책에 대하여 각 소득 계층 간의 결과가 상이함은 앞서 언급한 소득 계층들의 경제적 특성에도, 각 계층에서 변수 값의 특성으로부터도 기인할

24) 특히 상위 계층에서 여성의 복지정책 선호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여성의 고용 형태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남편이 고소득자일수록 아내가 전일제 고용으로 취업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가 존재한다(장지연·전병유 2014).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소득계층에 있어 재분배정책 또는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 정도, 소득불평등 인식 정도 등이 한 값으로 치우쳐진 분포를 갖는다면, 전체 데이터에서는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어도 각 계층별 분석에 있어서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주의 깊게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6> 정책 선호에 대한 소득 계층별 분석 결과

소득계층	재분배 정책			복지 정책		
	상	중	하	상	중	하
정책 선호 결정요인						
소득 불평등 인식	0.420*** (0.142)	0.156*** (0.051)	0.015 (0.078)	0.201** (0.095)	0.148*** (0.046)	0.383*** (0.117)
정치성향	-0.130 (0.103)	-0.089** (0.044)	-0.117 (0.079)	-0.234** (0.092)	-0.088** (0.040)	-0.028 (0.070)
한국사회취약도: 경기 침체	-0.092 (0.121)	-0.051 (0.052)	-0.306*** (0.089)	0.058 (0.097)	0.044 (0.048)	0.037 (0.087)
한국사회취약도: 실업·빈곤	-0.046 (0.114)	-0.175*** (0.054)	0.004 (0.081)	-0.112 (0.097)	-0.135*** (0.050)	-0.109 (0.074)
임금노동자	0.117 (0.259)	0.294** (0.132)	0.552** (0.268)	0.361 (0.226)	0.077** (0.121)	0.077 (0.220)
비경제활동자 및 실업자	0.061 (0.318)	0.117 (0.137)	0.516** (0.239)	0.264 (0.262)	-0.009 (0.128)	0.020 (0.199)
성별	0.182 (0.217)	-0.027 (0.093)	-0.032 (0.163)	0.431** (0.189)	-0.215** (0.085)	-0.150 (0.146)
연령	0.002 (0.012)	0.004 (0.004)	0.014** (0.006)	-0.018* (0.010)	-0.001 (0.003)	0.002 (0.005)
결혼	-0.225 (0.321)	0.088 (0.111)	-0.206 (0.178)	0.159 (0.285)	-0.053 (0.101)	0.063 (0.161)
도시거주	-0.181 (0.490)	-0.163 (0.145)	-0.357* (0.202)	0.095 (0.374)	0.064 (0.130)	0.018* (0.172)
교육수준	-0.092 (0.088)	0.037 (0.039)	0.050 (0.073)	-0.115 (0.089)	0.007 (0.035)	-0.020 (0.065)
월평균가구소득	0.034 (0.044)	-0.005 (0.017)	0.019 (0.069)	0.017 (0.044)	-0.001 (0.015)	0.018 (0.060)
부모 세대 대비 생활수준 변화	-0.008 (0.092)	0.082** (0.045)	0.058 (0.068)	-0.040 (0.094)	0.042 (0.039)	0.026 (0.053)

소득 불평등 인식에 대한 요인						
자신 소득에 대한 인식	-0.043 (0.112)					-0.153* (0.093)
취업기회의 불평등	0.562*** (0.116)					0.319*** (0.098)
교육기회의 불평등	-0.007 (0.100)					0.165** (0.081)
여성대우의 불평등	0.644*** (0.111)					0.375*** (0.082)
Atanhrho	-0.416*** (0.159)	-0.127 (0.098)	-0.085 (0.155)	-0.051 (0.168)	-0.084 (0.089)	-0.409** (0.161)
NO. Obs.	209	850	291	209	850	291
Log likelihood	-363	-662	-225	-173	-746	-581
Chi square	170.42	61.42	38.13	29.96	42.78	132.55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계산

주: 1) 월평균 가구소득의 분류기준: 상(750만원 이상), 중(200~750만원), 하(200만원 미만)

2) 나머지는 <표 5>의 주석과 동일

3. 주관적 계층의식(Rank)별 분석 결과

<표 7>은 주관적 계층의식으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표 하단의 Antahrho 통계값은 재분배정책 선호에 있어서 하위계층의 경우와 복지정책 선호에 있어서 중위계층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값을 나타내었다.²⁵⁾ 또한 내생성 고려 여부에 따라 소득 불평등 인식변수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졌다. 따라서 두 경우에서만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순위형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CMP 추정방법과 도구변수를 사용한 결과를 <표 7>에 정리하였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재분배 및 복지 정책에 미치는 효과는 주관적 계층의식을 바탕으로 그룹을 구분하여 분석할 경우에도 소득 계층별 분석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소득 계층별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분배 정책에 대한 하위계층 분석에서만 소득분배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재분배 및 복지정책 선호 간의 정(+)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25) 각각의 경우 Atanhroh의 값이 -0.416과 -0.40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나머지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소득불평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재분배 및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7> 정책 선호에 대한 주관적 계층인식에 따른 계층별 분석 결과

주관적 계층의식	재분배 정책			복지 정책		
	상	중	하	상	중	하
정책 선호 결정요인						
소득 불평등 인식	0.302** (0.141)	0.342*** (0.090)	0.090 (0.084)	0.317** (0.159)	0.213*** (0.046)	0.235* (0.138)
정치성향	-0.106 (0.086)	-0.060*** (0.045)	-0.187** (0.086)	-0.064 (0.083)	-0.124*** (0.041)	0.059 (0.079)
한국사회취약도: 경기 침체	-0.074 (0.107)	-0.070 (0.055)	-0.270* (0.104)	0.146 (0.110)	0.019 (0.047)	-0.003 (0.085)
한국사회취약도: 실업·빈곤	-0.110 (0.120)	-0.126*** (0.056)	-0.015 (0.096)	-0.239** (0.120)	-0.079* (0.047)	-0.140** (0.071)
임금노동자	0.383 (0.267)	0.151 (0.134)	0.681*** (0.240)	0.318 (0.231)	0.103 (0.120)	0.057 (0.210)
비경제활동자 및 실업자	-0.334 (0.285)	0.128 (0.140)	0.484** (0.235)	-0.141 (0.236)	0.014 (0.126)	0.173 (0.212)
성별	-0.067 (0.196)	0.017* (0.092)	-0.012 (0.179)	-0.061 (0.175)	-0.151* (0.084)	-0.079 (0.156)
연령	-0.007 (0.007)	0.011 (0.004)	0.000 (0.007)	-0.020*** (0.007)	0.001 (0.003)	-0.001 (0.005)
결혼	-0.032 (0.250)	-0.050 (0.108)	-0.208 (0.184)	-0.037 (0.236)	0.038 (0.099)	-0.149 (0.164)
도시거주	0.032 (0.293)	-0.263 (0.141)	-0.259 (0.230)	0.203 (0.233)	-0.081 (0.126)	0.103 (0.197)
교육수준	-0.021 (0.079)	0.022 (0.038)	-0.019 (0.076)	-0.109 (0.069)	-0.004 (0.036)	0.018 (0.063)
월평균가구소득	-0.023 (0.017)	0.007 (0.009)	0.003 (0.023)	-0.006 (0.016)	-0.004 (0.008)	-0.020 (0.019)
부모 세대 대비 생활수준 변화	-0.185* (0.097)	0.118 (0.044)	0.009* (0.070)	-0.116* (0.098)	0.057 (0.040)	0.000 (0.056)

소득분배 불평등 인식에 대한 요인						
자신 소득에 대한 인식	-0.078 (0.102)	-0.091*** (0.053)		-0.095 (0.096)		-0.049 (0.079)
취업기회의 불평등	0.337*** (0.118)	0.317*** (0.056)		0.348*** (0.111)		0.381*** (0.096)
교육기회의 불평등	0.066 (0.121)	0.141*** (0.049)		0.085 (0.119)		0.189** (0.082)
여성대우의 불평등	0.549*** (0.103)	0.516*** (0.056)		0.535*** (0.104)		0.353*** (0.077)
Atanhrho	-0.292** (0.147)	-0.232** (0.092)	-0.054 (0.170)	-0.326* (0.178)	-0.090 (0.091)	-0.254* (0.152)
NO. Obs.	212	870	268	212	870	268
Log likelihood	-393	-1556	-188	-411	-695	-527
Chi square	132.05	370.4	28.91	137.56	66.93	122.64

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계산

- 주: 1) 주관적 계층인식 분류기준 : 상(7~10), 중(4~6), 하(1~3)
2) 나머지는 <표 5>의 주석과 동일

통제변수의 경우는 대부분 객관적 소득 계층 분류별 분석 결과와 유사하였다. 재분배 정책 선호의 경우 하위계층에서 설명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는 반면 상위계층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복지정책 선호의 경우에는 반대로 하위계층의 통계적 유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계층에서는 비경제활동자 및 실업자의 경우가 자영업자에 비해 재분배정책을 선호하고 반대로 상위계층으로 인식하는 경우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에 속해있는 비경제활동자 또는 실업자의 특성 차이 또는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인식자체의 차이에서 기인할 수 있겠다.

반면 소득별 분석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계수들도 존재하는데 실업 및 빈곤에 있어 한국사회가 취약하다고 느낄수록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을 확률이 객관적 소득 계층 분석에서는 중위소득 계층에서 나타났던 것에 비하여 주관적 계층 분석에서는 전 계층에 걸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세대 대비 생활 수준이 나빠졌다고 인식할수록 하위계층에서는 재분배 정책 선호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계층에는 반대로 두 정책 모두 선호도가 낮아지는 부의 관계가 나타나 주관적 계층 의식 수준에 따라 부모 세대 대비 생활 수준이 나빠진 원인이나 책임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

다. 이렇게 소득별 분석과 주관적 계층의식별 분석이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주관적 계층의식과 소득이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으로 고려된다.²⁶⁾

VII. 결 론

최근 OECD 평균 대비 국민소득이 차지하는 위치에 비하여 재분배 및 복지 수준이 낮다는 문제의식²⁷⁾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동시에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이 부상하면서 재분배정책의 실효성 및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의 소득재분배 및 복지정책의 다양한 형식과 그에 따른 분배 수준은 해당 국가의 소득불평등 정도와 경제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 이외에도 구성원들이 재분배와 복지에 대해 갖는 인식과 선호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운동을 통해 분배 수준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하여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불만이 높아질수록 중위 투표자(median voter)들이 의견이 중요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특성상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황선재 2015).

특히 한국의 경우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재분배 및 복지에 대한 인식이 서구와는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책의 선호가 차이가 나는 원인이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불평등에 대한 상이한 사회적 인식 때문일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적 변수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나, 사회적 인식이 정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떤 요인들로 인하여 견해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불평등인식 변수의 내생성을 다루고 있는 문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4년 제12차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26) 예를 들어 재분배정책에 대한 정치성향의 영향은 주관적 중하위 계층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난 반면 객관적 소득 기준에 의한 하위 소득계층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임금노동자의 경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로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응답자이더라도 본인을 주관적으로 하위 계층이라고 인식하거나 혹은 그 반대라고 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김유경 2012).

27)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규모는 2015년 기준 11.2%로써 OECD평균 22.0%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9).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재분배정책 및 복지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정책 선호도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내생적 순위형 프로빗 모형(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에 CMP추정방법을 적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체 데이터(Pooled data)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람들은 소득 불평등 정도가 크다고 느낄수록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개인보다는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변수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이 과소 보상되었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기회의 불평등이 크다고 생각할수록 소득 불평등이 크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지닌 사람일수록 재분배 및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및 성별 변수의 경우 정책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었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재분배를 선호할 확률이 높았고 여성이 남성보다 복지정책을 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객관적인 기준인 가구소득별로 그룹을 나누어 살펴 분석할 경우 재분배정책 선호에 있어서 계층별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하위계층에서는 소득불평등 인식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중·상위 계층에서는 소득불평등이 커질수록 재분배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생성을 고려할 경우 상위 계층에서 소득불평등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의 경우 모든 소득 계층에서 소득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하게 요구할 확률이 높았다.

주관적 계층 의식으로 그룹을 나누어 분석할 경우 대체적으로 소득별 분석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소득불평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재분배 및 복지정책에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통제변수의 경우 소득 기준 분석과 주관적 계층의식 기준의 분석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객관적 소득을 바탕으로 한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의식 간의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여 재분배 및 복지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존 문헌에서 과소 추정했던 불평등 인식의 영향에 대하여 재고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한 시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가용할 만한 설문 문항 및 연도별 데이터의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도구변수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또한 계층별 분석을 위하여 응답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일부 그룹이 샘플 수가 작아짐에 따라 연구 결과에 편향(small sample bias)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심도 있는 서베이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다면 계층별 분석 결과의 신뢰성이 개선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서베이데이터의 특성상 질문과 선택지에 따라 응답 결과가 민감할 수 있으며 설문에 존재하지 않아 모형에 포함하지 못한 중요한 변수가 누락 되었을 가능성이 연구의 한계로 존재한다. 만일 Kuhn(2015)이 시도했듯이 세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지역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의 평균값을 사용할 수 있다면 도구변수가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본 연구의 불평등인식 관련 데이터는 2009년과 2014년에만 수집되어 있는 상황으로 패널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다면 불평등과 정책선호에 대한 동태적(dynamic) 분석을 통해 좀 더 높은 이해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또한 재분배 및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세, 복지지출,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선호와 같이 다양화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은 찬성하나 복지정책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으며, 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증세에는 찬성하나 복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찬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Williamson 2015).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정책 선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재분배 및 복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한편, 기회의 불평등 및 자기 소득의 과소보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는 연구 결과는 응답자들이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에 대해 노력의 대가와 같은 정당한 격차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불평등에서 오는 구조적 불평등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신의 소득에 대한 보상과 기회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가늠하는 척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는 구성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적절한 정책을 제공하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상욱, 임영진, 신승배. 2016.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지범, 강정환, 김석호, 김창환, 박원호, 이윤석, 최성수, 최슬기, 김술이. 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김유경. 2012. “중산층의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보건·복지 Issue & Focus』 152, 1-8.
- 김윤태, 유승호, 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한국학연구』 45, 183-212.
- 김준일, 서환주, 신우진. 2016. “소득불평등에 대한 기회불평등의 기여도 분석 : 2000년대 한국경제를 중심으로.” 『질서경제저널』 19(1), 41-67.
- 남재욱. 2018. “한국 복지국가 성장의 재분배적 함의: 누가 복지국가로부터 소외됐는가?” 『한국사회정책』 25(4), 3-38.
- 류만희, 최영. 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과학학회보』 13, 191-210.
- 박선경. 2017. “자신의 상대적 소득수준에 대한 오인과 재분배 선호.” 『한국정당학회보』 16(1), 71-100.
- 백승주, 금현섭. 2012. “소득불평등과 복지정책선호: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 411-440.
- 이양호, 지은주, 권혁용. 2013. “불평등과 행복.” 『한국정치학회보』 473, 25-43.
- 이용, 임란. 2014. “박탈경험과 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44, 93-122.
- 이지은, 이재완. 2015. “사회적 약자 보호정책 선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OUM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9(4), 359-390.
- 이충환. 2015. “빈곤 원인 인식과 불평등 인식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375-401.
- 이현우, 박시남. 2016.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오토피아』 311, 267-298.
- 이희정. 2018. “청년층 계층인식 변화가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학』 523, 119-164.
- 장승진. 2011. “행복의 정치경제학: 소득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한국인들의 삶의

-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102, 43-66.
- _____. 2017. "사회적 공정성 인식과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동서연구』 29(2), 1-23.
- 조정인. 2014.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기회 불평등 인식이 한국인들의 재분배정책 선호에 끼치는 영향력." 『정치정보연구』 172, 175-196.
- 최유석. 2011.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 57-83.
- 하솔잎, 이우진. 2016. "한국인의 재분배 선호도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94, 119-165.
- 황선재. 2015. "불평등과 사회적 위험: 건강·사회문제지수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1, 5- 25.

영문 자료

- Alesina, Alberto and Eliana La Ferrara. 2005.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6), 897-931.
- Benabou, Roland. 2000. "Unequal societies: Income distribution and the social contract." *American Economic Review* 90(1), 96-129.
- Brunori, Paolo, Francisco HG Ferreira and Vito Peragine. 2013. "Inequality of opportunity,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mobility: Some international comparisons." in *Getting Development Right*, edited by Eva Paus, 85-115.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Cheung, Felix and Richard E. Lucas. 2016. "Income inequality is associated with stronger social comparison effects: The effect of relative income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0(2), 332-341.
- Cruces, Guillermo, Ricardo Perez-Truglia and Martin Tetaz. 2013. "Biased Perception of Income Distribution and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8, 100-112.
- Clark, Andrew E., Niels Westergård-Nielsen and Nicolai Kristensen. 2009. "Economic satisfaction and income rank in small neighbourhoods."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7(2-3), 519-527.

- Cusack, Thomas R., Torben Iversen and Philipp Rehm. 2008. "Economic shocks, inequality, and popular support for redistribution." *Democracy, inequality and representation*, 203-231.
- Easterlin, Richard A. 1974. "Does economic growth improve the human lot? Some empirical evidence." in *Nations and households in economic growth*, edited by Paul A. David and Melvin W. Reder, 89-125. New York: Academic Press.
- Ferrer-i-Carbonell, Ada. 2005. "Income and well-be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mparison income effec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6), 997-1019.
- Greene, William H. 2000. *Econometric Analysis*. New Jersey: Prentice Hall International.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4. "Fiscal Policy and Income Inequality." IMF Policy Paper.
- Jones, Andrew M., Nigel Rice, Teresa Bango d'Uva. and Silvia Balia. 2013. *Applied health economics*. New York: Routledge.
- Lowi, Theodore J. 1972. "Four systems of policy politics and cho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4), 298-310.
- Luttmer, Erzo FP. 2005. "Neighbors as Negatives: Relative Earnings and WellBe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0(3), 963-1002.
- Meltzer, Allan H. and Scott F. Richard.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5), 914-927.
- OECD. 2014. "Rising Inequality: Youth and Poor Fall Further Behind." *Income Inequality Update* 1-8.
- _____. 2019.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2020/10/16 검색).
- Oishi, Shigehiro and Selin Kesebir. 2015. "Income inequality explains why economic growth does not always translate to an increase in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26(10), 1630-1638.
- Piketty, Thomas. 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 Belknap Press.
- Roodman, David. 2011. "Fitting fully observed recursive mixed-process models with cmp." *Stata Journal* 11(2), 159-206.

- Roodman, David. and Jonathan Morduch. 2014. "The impact of microcredit on the poor in Bangladesh: Revisiting the evidenc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50(4), 583-604.
- Staiger, Douglas and James H. Stock. 1997. "Instrumental Variables Regression with Weak Instruments." *Econometrica* 65(3), 557-586.
- Slag, Michiel, Martijn J. Burger and Ruut Veenhoven. 2019. "Did the Easterlin Paradox apply in South Korea between 1980 and 2015? A case study."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66(4), 325-351.
- Stevenson, Betsey and Justin Wolfers. 2008. "Economic Growth and Subjective Well-Being: Reassessing the Easterlin Paradox."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2008, 1-87.
- Terza, Joseph V., Anirban Basu and Paul J. Rathouz. 2008. "Two-stage residual inclusion estimation: addressing endogeneity in health econometric modeling." *Journal of Health Economics* 27(3), 531-543.
- Kuhn, Andreas. 2015. "The Subversive Nature of Inequality: Subjective Inequality Perceptions and Attitudes to Social Inequality." IZA Discussion 9406. Bonn: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 Van Praag, Bernard. 2011. "Well-being inequality and reference groups: an agenda for new research."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9(1), 111-127.
- Vargas, Mauricio. 2015. "Identifying Binding Constraints to Growth: Does Firm Size Matter?" Working Paper No. 15/3.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Williamson, Vanessa. 2015. *Paying Taxes: Understanding Americans' Tax Attitudes*.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ts & Sciences.

부 록

<부록 표 1> 소득과 재산에 대한 불평등 인식 분포

응답척도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상	중	하	상	중	하
매우 평등	25 (1.8%)	0 (0.0%)	14 (1.6%)	11 (3.8%)	6 (2.8%)	13 (1.5%)	6 (2.2%)
약간 평등	171 (12.5%)	32 (14.5%)	98 (11.5%)	41 (14.0%)	41 (19.0%)	107 (12.2%)	23 (8.4%)
그저 그렇다	466 (34.1%)	81 (36.8%)	296 (34.7%)	89 (30.4%)	77 (35.6%)	309 (35.2%)	80 (29.3%)
약간 불평등	525 (38.4%)	75 (34.1%)	346 (40.5%)	104 (35.5%)	68 (31.5%)	359 (40.9%)	98 (35.9%)
매우 불평등	180 (13.2%)	32 (14.5%)	100 (11.7%)	48 (16.4%)	24 (11.1%)	90 (10.3%)	66 (24.2%)
전체	1367 (100.0%)	220 (100.0%)	854 (100.0%)	293 (100.0%)	216 (100.0%)	878 (100.0%)	273 (100.0%)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를 이용하여 저자계산

<부록 표 2> 취업기회에 대한 불평등 인식 분포

응답척도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상	중	하	상	중	하
매우 평등	50 (3.6%)	9 (4.1%)	27 (3.2%)	14 (4.8%)	12 (5.6%)	27 (3.1%)	11 (4.0%)
약간 평등	304 (22.2%)	59 (26.7%)	184 (21.5%)	61 (20.7%)	60 (27.8%)	188 (21.4%)	56 (20.4%)
그저 그렇다	431 (31.5%)	62 (28.1%)	291 (34.0%)	78 (26.5%)	58 (26.9%)	295 (33.5%)	78 (28.5%)
약간 불평등	475 (34.7%)	74 (33.5%)	289 (33.8%)	112 (38.1%)	69 (31.9%)	311 (35.3%)	95 (34.7%)
매우 불평등	110 (8.0%)	17 (7.7%)	64 (7.5%)	29 (9.9%)	17 (7.9%)	59 (6.7%)	34 (12.4%)
전체	1370 (100.0%)	221 (100.0%)	855 (100.0%)	294 (100.0%)	216 (100.0%)	880 (100.0%)	274 (100.0%)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를 이용하여 저자계산

<부록 표 3> 교육기회에 대한 불평등 인식 분포

응답척도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상	중	하	상	중	하
매우 평등	168 (12.3%)	35 (15.8%)	96 (11.2%)	37 (12.6%)	33 (15.3%)	105 (11.9%)	30 (10.9%)
약간 평등	543 (39.7%)	86 (38.9%)	354 (41.4%)	103 (35.2%)	93 (43.1%)	354 (40.3%)	96 (35.0%)
그저 그렇다	345 (25.2%)	56 (25.3%)	210 (24.6%)	79 (27.0%)	50 (23.1%)	215 (24.5%)	80 (29.2%)
약간 불평등	266 (19.4%)	36 (16.3%)	172 (20.1%)	58 (19.8%)	34 (15.7%)	178 (20.3%)	54 (19.7%)
매우 불평등	47 (3.4%)	8 (3.6%)	23 (2.7%)	16 (5.5%)	6 (2.8%)	27 (3.1%)	14 (5.1%)
전체	1369 (100.0%)	221 (100.0%)	855 (100.0%)	293 (100.0%)	216 (100.0%)	879 (100.0%)	274 (100.0%)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를 이용하여 저자계산

<부록 표 4> 여성의 대우에 대한 불평등 인식분포

응답척도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			주관적 계층의식		
		상	중	하	상	중	하
매우 평등	72 (5.3%)	8 (3.6%)	36 (4.2%)	28 (9.6%)	19 (8.8%)	33 (3.8%)	20 (7.3%)
약간 평등	288 (21.0%)	44 (19.9%)	167 (19.5%)	77 (26.3%)	50 (23.1%)	177 (20.1%)	61 (22.3%)
그저 그렇다	463 (33.8%)	69 (31.2%)	301 (35.2%)	93 (31.7%)	66 (30.6%)	314 (35.7%)	83 (30.4%)
약간 불평등	458 (33.5%)	81 (36.7%)	299 (35.0%)	78 (26.6%)	67 (31.0%)	311 (35.3%)	80 (29.3%)
매우 불평등	88 (6.4%)	19 (8.6%)	52 (6.1%)	17 (5.8%)	14 (6.5%)	45 (5.1%)	29 (10.6%)
전체	1369 (100.0%)	221 (100.0%)	855 (100.0%)	293 (100.0%)	216 (100.0%)	880 (100.0%)	273 (100.0%)

*출처: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를 이용하여 저자계산

Abstract

How the Per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Can Affect to Policy Preferences: An 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 Approach

Jee Young Kim ■ Sun Moon University

Min Hee You ■ Yonsei University

Yun Jeong Choi ■ Yonsei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individuals' per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may affect the preference of redistribution and welfare policy by applying an endogenous ordered probit regression model to the 2014 Korean Social Survey. We find that higher level per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leads to stronger support for redistributive and welfare policies. The impact of economic inequality perception on policy support varies across income classes as well as subjectively identified classes. The likelihood of economic inequality perception increases as the recognition level of opportunity inequality and unfair compens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mpact of economic inequality perception may be underestimated without controlling the endogeneity problem.

Key Words: economic inequality, perception, redistribution policy, welfare policy, endogenous ordered probit